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3/ 7/ 12 통권 1631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히틀러 vs 히로히토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 · 재정 · 조세 · 고용)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중 회계사:

단일회사는 동일제조사업장에 별도의 도·소매 사업
장 등록 안됨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상품권의 구입 및 사용에 대한 지출증빙요건
-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 · 조세 · 재정 · 고용 부분)
- 국민 편의 및 외환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환거
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대주주가 아닌 자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장외매매
거래 양도하는 경우라도 양도세 과세대상 아님

(p.15)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공유·미용실,사업장 공동사용,삽입삽의 매출과 소득배분 쟁점들〉

개념, 구분	총액매출반영방법	각자매출반영방법	각자 별도수금
사업장소 계약	총괄대표가 단독계약	각 공동사용자와 계약	각 단독사업자와 계약
사업자등록 대표	대표자 1인 등록(공동 사업자)	대표자 1인 일반과세 자 등록 + 복수사업자 (각 간이과세자) 등록	각자 별도 사업자등록
대외명칭 공유	단일브랜드 사용	각각 브랜드 선택가능	자기상호 별도 사용
고객으로부터 수금	온라인수단(결제대행 페이나 신용카드 입 금) 통한 일괄입금	좌동 (부가세 10% 징수)	각자 전자수금
부가가치세 신고	총괄일반부가세 과세	· 각각 일반과세자 가 능(부가세 별도) · 각 배분되면 간이과 세 가능한 매출(연 8천만원 이하)로 분 산되는 경우임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 세나 간이과세
외부 세금계산서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능	간이과세자는 공제안 됨(대표사업자는 매입 세액 공제)	일반과세자 당연 공제
수익 · 비용 계산구조	총매출 - 임대료 - 공 동이용자에 3.3% 사 업소득 처리(원하면 근로소득 처리)	총매출액 중 공동이용 자의 각자 간이과세매 출(대표사업자에게 현 금영수증 발행)	각자 매출 · 각자비용
임대료, 장소이용료	공동운영비 배분 형식	각자 실제 배분부담	별도매입세금계산서
종합 소득신고	대표자의 단일종합소 득신고 (3.3% 소득자의 각자 종합소득신고)	실제 배분된대로 각각의 종합소득신고	각자 종합소득신고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31호 / 주간 28호

2023. 7. 12. (수)

· 발 행 인 : 이 윤 연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공유 미용실, 사업장 공동사용, 삼인삼의 매출과 소득배분 쟁점들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단일회사는 동일제조사업장에 별도의 도·소매 사업장 등록 안됨	2
C E O 에 세 이	히틀러 vs 히로히토	6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제삼자에 의한 설비 파손으로 인한 비용 청구 시 회계처리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 문의 - 신용장 개설시기 및 수입시 간절중인 자산의 계상 여부 문의 - 설계변경으로 금형 폐기 문의 - 등기소유권외	8 9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지금거래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는 이자징수명세서 등이 지출증빙임	10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연금저축 인출·해지시 세율 -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의 통지기한	12 13
직 장 인 Survival	리더십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 ①	14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조세특례제한법§128④(2)에 따른 감면배제의 적용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가 입 기한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 하여야 하는 기한을 의미함 (사전법규소독 669, 2022.12.14) -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른 기타주주 상 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 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 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자본거래-2880, 2022.08.23)	15 16
세 정 뉴 스 와 해 설	부가가치세 신고 25일까지... 일반과세자 등 100만명에 세금비서 서비스	17
마케팅 Tax consulting	대주주가 아닌 자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정외매매거래 양도하는 경우라도 양도세 과세대상 아님	15
세 무 정 보	-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8
경 영 정 보	- 국민 편의 및 외환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6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 정환율	4

단일회사는 동일제조사업장에 별도의 도·소매 사업장 등록 안됨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컨설팅
(Deal business)
(829-7575)

1. 단일회사가 ① 동일 장소내의 분할된 각각 장소에서 ② 상이한 업종을 구분 운영하고 ③ 거래대금 수수 행위가 별개 장소인 경우만, 각각 사업자 등록 가능함

[부가가치세과-2092(2008. 7. 18)]

[요지]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기 회신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호('08.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법인사업자로 현재 1개의 사업자번호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번에 동일 지번상의 건물 1동을 매입하여 4부분으로 벽을 설치하여 4개의 사업부문으로 분할하여 운영하고자 함.

질의) 각 사업부문마다 각자 독립적으로 거래 및 대가의 수수가 이루어지며 각각 별도로 관리 운영 한다면 하나는 본점, 나머지 3개는 지점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 2008.01.04

【제목】 상이한 업종을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등록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때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II. 직매장은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사업장내에는 직매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3(2004. 6. 18)]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불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65.2-57, 1981.01.12.) 및 (부가1265-1358, 1983.10.12.), (부가46015-1845, 1994.09.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사업장 내에 별도의 직매장 설치안됨 [부가1265. 2-57 (1981. 1. 12.)]

동일사업장 내에 별도의 직매장 설치안됨 [부가1265. 2-57 (1981. 1. 12.)]

1. 질의내용 요약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2층은 법인의 본사사무실 및 공장으로 사용하고 1층은 직매장을 개설하여 자신이 제조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업태를 변경하여 소매업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질 의 】

1. 당사는 신사복 제조 전량수출업체였으나 1979년초부터 국내외 경기침체와 금융연체로 인하여 불가피 원·부자재재고 전량을 처분하고 하청에 의한 임가공업체로 전환하였음.
2. 임가공업작업시 조금씩 재고로 남아 있는 잉여품(신사복지)으로 완제품을 생산하여 동일한 제조장내에 직매장을 설치 직접 판매하고자 함(판매대상은 주로 종업원이며 소량임).
3. 위와 같이 동일한 제조장내라도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라면 직매장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매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은 경우 동일사업장내에는 직매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임

○ 부가1265-1358, 1983.10.12

제조업자가 자기제품을 개인가정에 소매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이므로 업태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

Ⅲ.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함

[부가가치세과-1394 (2011. 11. 10.)]

[회 신]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정정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855, 2009.12.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1855, 2009.12.23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00사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 2011.00월 00사업을 개시하고자 “00부동산.COM”을 열게 되었음
 - 이 사업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사업임
 - 본인은 새로운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였으나 동일 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자등록은 불가하다고 함

히틀러 vs 히로히토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윈스턴 처칠이 "과거를 잊는 국가는 미래를 갖지 못한다(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고 강조했다.

지난 3월16일 도쿄에서 한·일정상회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는 반성·사과없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기존입장만을 반복했다. 이미 회담전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일본제철의 이춘식 할아버지, 그리고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의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자의 제3자 변제에 반대하는 뜻을 전달"하려고 행정안전부 산하 지원재단을 방문했다.

일본문부과학성은 28일 오후 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 검정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조선인과 중국인을 '강제로'라는 표현이 사라지며 '끌려와'도 '참여해'로 바뀔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독도를 일본영토라는 것도 수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의 역사왜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갤럽의 6월말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다. 윤대통령의 긍정평가는 36%로 전락했다. 부정평가는 54%였다. 부정평가중 외교(22%),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11%)등이 큰 이유였다. 민심을 어기면 정치는 무너진다.

2차세계대전 전범국가인 독일과 일본은 서로 크게 다르다. 패전으로 몰린 히틀러는 전속사진작가이면서 연인이었던 에바 브라운과 벙커에서 1945년 4월29일 결혼, 4월30일 에바는 청산가리로 자살, 히틀러는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이렇게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에 따른 수많은 전범자들이 사형과 종신형 등 처절한 처벌을 받는다. 또 동독과 서독으로 쪼개져 몹시 댓가를 치렀다.

당연히 전범 나치 일당을 죄악시하여 교육받고 또 나치에 동조했던 독일국민들도 비판 받으며 살았다. 이러면서 서독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는 1970년 폴란드 바르샤바 게토기념비에서 비를 맞으며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죄했다.

이에 비하면 일본은 미국의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가 일본인을 분석한 유명저서인 '국화와

칼'(초판 1946년)에서 “일본인은 기회주의자”라는 표현을 책에서 여러번 강조했다.

1943년 11월 연합국 수뇌들이 모여 한국의 독립 등과 전범국가 분할점령과 전범 처벌을 선언한 카이로선언에 이어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에서도 전범자들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히로히토는 도쿄극동국제전범재판소의 피고석에 서지 않았다.

프랑스에서 파견된 베르나르 앙리판사는 “일본국왕을 심판하지 않았다”며 도쿄재판의 한계를 지적했다. 재판내내 미군 소속 조지프 키넨 수석검사와 신경전을 펼쳤던 호주출신의 윌리엄 웨브재판장(수석 판사)은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히로히토에게 반드시 실형을 선고했어야 했다”고 한탄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었다. 히로히토 전범면책은 일본인들 스스로를 전쟁피해자로 여기게 만들었다. 미군공습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생명과 재산을 잃었다는 ‘피해자 기억’이다.

역사를 왜곡하는 ‘기회주의자’들이라는 미국의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의 평가에 공감할 수 밖에 없다. 역사왜곡은 미래창조를 비튼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6월 30일 (금)	7월 3일 (월)	7월 4일 (화)	7월 5일 (수)	7월 6일 (목)
미	달 러 (USD)	1312.80	1319.40	1310.00	1301.70	1300.80
일	본 엔 (JPY)	906.97	913.87	905.57	900.92	900.05
영	국 파 운 드 (GBP)	1655.51	1675.37	1662.46	1654.85	1652.47
캐	나 다 달 러 (CAD)	990.72	995.81	988.75	984.35	979.11
홍	콩 달 러 (HKD)	167.48	168.36	167.22	166.22	166.31
중	국 원 (CNH)	181.05	181.77	180.88	179.53	179.87
유	로 화 (EUR)	1426.55	1439.47	1429.80	1416.38	1411.89
호	주 달 러 (AUD)	869.01	878.92	874.23	871.10	865.62
싱	가 폴 달 러 (SGD)	967.96	975.56	969.65	964.62	961.03
말	레이시아 링 기 트 (MYR)	281.02	282.68	280.66	279.82	279.56

제삼자에 의한 설비 파손으로 인한 비용 청구 시 회계처리

Q 회사가 제작한 설비에 대해 아무 관련없는 A업체에서 설비와의 충돌사고가 발생해 해당 설비 중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A업체에서는 공제조합 등 보험을 통해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보상을 해주었고, 회사는 파손된 부분을 타 업체를 통해 수리를 하였습니다.
수리비용은 약 3천만원, 보험청구수령액은 약 5천만원일 때 수리비용 3천만원에 대해 외주비 등의 비용처리가 아닌 보험수령액과의 상계가 가능한가요?
K-IFRS 1037호 문단 53~58 변제에 대한 기준서를 적용하여 상계처리해도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A 귀사의 의견대로 변제에 대한 기준서를 적용하여 상계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 문의

Q 22년 12월 31일 현재, 1주택이며
세대주 : 배우자(소득없음)
세대원 : 근로소득자
21년 10월 5억 이하 아파트 분양받아 주담대 실현(상환기간 40년)했고, 22년 세대주인 배우자 명 의와 배우자 이름으로 원리금 상환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세대원(근로소득자)이 22년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장 개설시기 및 수입시 건설중인 자산의 계상 여부 문의

Q 외국에 있는 수입처에서 설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구입가 90만 유로)
수입처가 제시한 결제조건은 신용장 개설(100%)하고,
선적시 90%, 입고 검수 완료 후 10%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90만유로의 설비를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고 싶은데,

신용장 개설일 or수입일 중 어느 일로 건설중인자산을 인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 건설중인 자산도 자산항목에 해당하므로 기업회계상 자산의 인식조건이 충족하는 경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모두 이전되는 시점에 자산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설계변경으로 금형 폐기 문의

Q 당사는 자동차 부품업체로 카메이커에 납품하는 제품의 생산을 위해 금형을 제작업체에 의뢰하고 금형제작에 들어가는데, 중간에 카메이커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해당금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이에 대한 금형제작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질문인 즉, 금형실패 또는 폐기하는 비용이 아니었다면 금형매출로 인식을 했을텐데, 이 경우 폐기금형의 제작비용 회수를 위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금형대 회수금-금형대 제작비용의 차는 잡수입으로 계상하면 될런지 아니면 금형매출로 봐도 무방한지 여부입니다.

A 금형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금형제작비용을 보전받는 경우는 매출보다는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등기소유권외

Q 1. a회사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주식전환청구후에 당사로 등기소유권이 넘어오는 날은 어떤것을 확인하나요?

2. 전환사채 전환권가치포함 35를 전환하여 그 차액을 전환이익, 계정으로처리하고자 하는데 전환이익이라는 계정과목이 있는지요?

A 1. 전환권 행사에 따른 등기소유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세무회계상의 내용이 아니므로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2. 계정과목이란 법률이나 회계기준에서 규정하여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자신들의 거래를 잘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전환권행사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은 애초 사채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도 됩니다.

자금거래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는 이자징수명세서 등이 지출증빙임

상담실 백종훈 차장

법인은 지출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입수하여야 하며, 특히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증빙영수증을 입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설비확충이나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이나 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출과 관련된 증빙을 입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금융기관에게 이자를 지급시 상대방의 이자징수명세서 등이 지출증빙임

이자를 지급하는 거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때에는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였다는 표시인 원천징수영수증이 증빙이 된다.

하지만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뒤 지급하는 이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이자액의 전액을 지급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도 구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 등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출거래장상의 이자납부내역 또는 은행의 이자징수명세서 등을 지출증빙으로 첨부하여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금융기관이더라도 영업인가가 취소되거나 파산으로 인해 설립된 파산재단은 법인세법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반드시 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을 하여야 한다.

♣ 서일-872, 2007.06.25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 17826호로 개정 후의 것)" 제111조 제2항에 규정된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내의 금융기관이 아닌 해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뒤 지급하게 되는 이자비용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따라서 해당 해외국가와의 조세조약이나 국내세법(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처리하면 된다.

♣ 서이46017-11558(2002.8.23.)

내국법인이 일본은행(일본의 중앙은행 및 일본정부·중앙은행 또는 양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당해 차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일본은행 본점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일조세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총액의 10%(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영수증

타인이나 관계사 등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적정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또한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비용(=손금)인정이 가능하다.

이때의 지급이자(거래 상대방이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한다.

따라서 해당 증빙으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및 보통예금 통장사본 등을 비치하고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면 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연금저축 인출 · 해지시 세율

일반적 사례

세율 16.5%

세액공제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

부득이한 사유 인정되는 사례

세율 3.3~5.5%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용양
- 파산, 개인회생
- 해외이주 혹은 사망
- 천재지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2주택자 취득세액

종전주택	신규주택	적용세율	산출세액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8%	800만원
	비조정대상지역	3%	300만원

※ 공시가격 10억원 주택 기준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의 통지기한

연부연납 신청대상 세액 구분	신청기한	허가통지 기한
•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할 세액	신고기한 이내	상속세 :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 신고기한부터 6개월
• 기한 후(수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	기한후(수정) 신고 시 (결정통지 전)	상속세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 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증여세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 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신고 후 무납부에 대한 고지세액 • 무신고자나 미달신고자의 신고세 액을 초과한 고지세액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4일 이내
• 증여자 연대납세 의무에 대하여 납 부하는 증여세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	
• 연부연납 신청 시 특정 납세담보물 을 함께 제공한 경우	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간주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세목			연부연납기간	
			'08. 1. 1. ~ '22. 12. 31. 상속 · 증여분	'23. 1. 1. 이후 상속 · 증여분
상속세	가업 상속재산	50% 미만	• 10년간 분할납부(3년 거치 가능)	• 20년간 분할납부(10년 거치 가능) ※ 가업상속재산 비율 관계없이 적용
		50% 이상	• 20년간 분할납부(5년 거치 가능)	
		일반상속재산	• 10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22. 1. 1. 이후 상속분부터	
증여세			•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리더십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 ①

1. 더 많은 이니셔티브 수행

상사는 항상 직원에게 입증된 챔피언을 제공하는 작업을 위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항상 현재 지정된 것보다 더 많은 임무를 맡도록 노력하십시오. 귀하의 직무 내용 이외의 추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잠재력이 발휘됩니다. 더 많은 책임을 맡음으로써 리더십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 의사소통 능력 향상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입니다. 목표, 기술, 의도를 전달하고 팀원을 이해시키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듣기 능력에 집중하는 좋은 리더로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언어적, 비언어적 능력 이 필수입니다. 리더십 기술을 향상시키려면 조직 내 직원 간의 원활한 의사 소통과 완벽한 경청 기술이 필요합니다.

3.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지식 습득

오늘날의 리더십 스타일, 자신이 가진 강점, 노력해야 할 영역을 아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자신의 기술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리더십 스타일 테스트를 치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일반적인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약한 부분을 찾았다면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4.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직업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완벽한 리더는 리더십 기술을 개발하여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기회를 낚아채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최 신 판 례 예 규

조세특례제한법§128④(2)에 따른 감면배제의 적용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기한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기한을 의미함

사전법규소득-669, 2022.12.14

■ 질 의

- 질의인은 건설업/조경식재공사 와 서비스업/묘지 관리업을 영위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
- '20.1월 질의인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이 현금영수증가맹대상에 편입되어 '21.5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함

질의

-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사업자가 소득세법상 법정된 기한 내에 가입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라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가입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128④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9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대주주가 아닌 자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장외매매거래 양도하는 경우라도
양도세 과세대상 아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자본거래-4232, 2022.12.01

■ 질 의

- 신청인은 비상장법인인 중견기업의 주식을 장외거래로 취득하였으며, 해당 법인은 이후 K-OTC에 지정됨
- 신청인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 K-OTC를 통해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이 과세되는지 여부

■ 회 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한함)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

목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른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자본거래-2880, 2022.08.23

■ 질 의

- (주)AAA의 주주가 (주)BBB에게 양도한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식인지 여부

■ 회 신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른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7, 2010.07.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내국법인이 근로자로부터 반납 받은 급여를 익금에 산입한 후 그 금액을 재원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변제된 공익채권 중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법인-8108, 2022.11.30

■ 질 의

- 질의법인은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X.XX.XX.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
- 질의법인이 근로자의 급여를 반납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익금(잡수입 등)으로 처리 후 그 재원을 공익채권* 등에 변제 할 예정
- * 회생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관리인 등의 보수 등

질의

-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근로자의 반납 받은 급여를 공익채권에 변제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내국법인이 근로자로부터 반납 받은 급여를 익금에 산입한 후 그 금액을 재원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변제된 공익채권 중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 25일까지... 일반과세자 등 100만명에 세금비서 서비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6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일반과세자 522만명, 법인사업자 123만개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118만명에게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올해는 간단한 문답으로 신고서를 자동 완성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부 일반과세자를 포함해 100만명에게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가 대상이다.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

국세청 측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국세청, 조세소송 및 불복... 2주간 로스쿨 실무수습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학생 37명을 대상으로 조세불복 및 조세소송과 관련한 실무수습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9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해 7월까지 437명의 로스쿨 학생에 실무수습 과정을 제공했다.

올해 국세청에 실무수습을 신청한 곳은 25개 로스쿨 중 17개 곳이다.

실무수습에서는 국세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 납세자 권리보호, 법령해석, 조세소송, 조사심의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불복사건 관리, 불복사건 결정문 및 소송사건 서면 작성 등의 업무를 직접 해본다.

국세청은 강의실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현장 경험을 통해 우수한 조세전문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비법조인들이 선택할 직장으로서 국세청이 가진 장점들을 적극 부각해 우수 자원 영입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국세청(지방청·세무서 포함)은 송무, 조사심의, 납세자 보호 등 법무 역량 강화를 위해 변호사를 채용해 운용 중이며, 지난해 말 기준 채용 변호사는 총 106명이다.

국세청은 예비 법조인들에게 다양한 국세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우수 법조인들을 계속적으로 영입육성하여 국세행정 각 분야에서 법적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10월부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주택연금 가입 가능

10월부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3일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노후주거 및 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됐다.

당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정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됐다.

이를 두고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노후 보장은 물론 최근 주택가격 급등 등으로 주택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을 위해 주택가격 요건 확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행령에서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 및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획재정부, 2023. 7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이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물가·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규제 혁신 및 인프라 구축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이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6월 30일(금)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이는 웹페이지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1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

1. 세제·금융

□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공제율 30%) 혜택('23.7.1.)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 가능('23.12.14.)
 - *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11년 G20 도입)
-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의 기존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하여, 더 유리한 대출로 한 번에 전환 가능한 '온라인·원스톱 대환 대출' 서비스 운영('23.5.31.)
 - *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신용대출 취급 주요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대출 대상

2. 교육·보육·가족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23.2)에 따라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 전환 본격 추진('23 하반기)
 - * AI 디지털교과서 개발('25년 목표), 교원의 “하이터치 하이테크**” 역량 강화, 시범교육청 중심의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디지털 새싹 캠프 운영 등
 - ** 하이터치 : 교사의 역할 변화(지식전달자→학습 참여 유도 및 사회·정서적 역량 함양)
하이테크 :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생별 최적화 교육
- 스톡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의 피해자 보호 가능하도록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3.7.18.)
 - * 1366센터(☎지역번호+1366)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제공
-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23.6.1.)
 - *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상을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3. 보건·복지·고용

-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23.9.25.)
 - *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
-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23.12월)
 - * 비대면 상담, 교육·정보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가상현실 등 신기술로 마약류 오남용의 정신·신체적 폐해를 체험하는 등 다양한 체감형 콘텐츠 제공



-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과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23년 하반기)

*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방문형 돌봄·가사, 심리, 동행 등 서비스 지원

** '23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 우선 추진, 향후 단계적으로 지역 및 규모 확대

-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직무능력은행제)' 구축('23.9월)

* (개인) 직무능력계좌와 나의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 발급 → 취업 및 경력개발 등에 활용

** (기업) 구직자가 제출한 인정서 통해 직무능력정보 확인,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

4. 국토·교통

-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23.7.2.)

* ①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②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③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지원 등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을 월 44회에서 60회로 상향하여 교통비 절감 효과 확대(월 1.1~4.8만원 → 월 1.5~6.6만원)('23.7월)

* 알뜰교통카드 발급사는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

- 국내공항 이용승객 편의를 위해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 도착승객으로 확대 운영('23.7월)

* (기존) 김포·김해·대구·청주·광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 도착승객만 대상

(확대) 김포·김해·대구·청주·광주·제주공항 출발 → 김포·김해·대구·청주·광주·제주공항 도착승객 대상

5. 환경·기상

- 극단적 집중호우* 발생 시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23.6.15., 수도권 시범운영)

* 50mm/1h, 90mm/3h 호우 동시 관측 시 1회 발송

- 민간 중심(공동주택-수거업체 계약)으로 이루어지던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 체계를 지자체 중심(공동주택-지자체-수거업체 계약)으로 개편('23.12.28.)

* 재활용품 가격 하락, 수급 불안정 등에 따른 수거 대란 우려 방지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 주요 원재료를 납품받는 기업은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물품이 제값을 받는 여건 조성('23.10.4.)
 - * “주요원재료”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함
- ☐ 급격한 유선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고, 10G 인터넷서비스 확산을 위해 신축 건축물에 광케이블 설치하도록 의무화('23.6.7.)

7. 농림·수산·식품

- ☐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청년층에 확산하기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69만명→ 234만명)('23.5월)
- ☐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가리비, 우렁챙이, 방어, 전복 및 부세(총 5종)를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품목으로 추가 지정('23.7.1.)
- ☐ 물류가 최적화(先거래 後물류)되고,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23.11월)

8. 국방·병무

- ☐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 연구, 전문의 자문 및 AI기술을 활용한 「마음건강」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 제공('23.7~8월)

9. 행정·안전·질서

- ☐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23.4.18.) 및 임차권등기 신속화('23.7.19.)
 - * ① 해당 주택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②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만 나이*로 민사·행정 기준 통일**('23.6.28.)
 - *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하고,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
 - **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음(예 :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행위로 처벌('23.7월)

* 온라인 스토킹 :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온라인 사칭행위 등

- SRT 승차권 예매 등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에서도 신청·이용 가능('23.6.27. 이후 순차 개통)

*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국립수목원 예약, 국립세종·백두대간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서비스 등 ** 네이버, 카카오T, 토스, 신한마이카, KB스타뱅킹, KB Pay 등

- 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일부 발췌)

<기획재정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현행>

구 분	공제율
❶ 신용카드	15%
❷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❸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❹ 전통시장·대중교통 ('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개정>

구 분	공제율
❶ 신용카드	15%
❷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❸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❹ 전통시장·대중교통 ('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 (좌 동)

- 추진배경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영화관람료를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 적용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격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부 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억원을 한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추진배경 :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주요내용 :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연금계좌 추가납입
(누적 한도 1억원) 허용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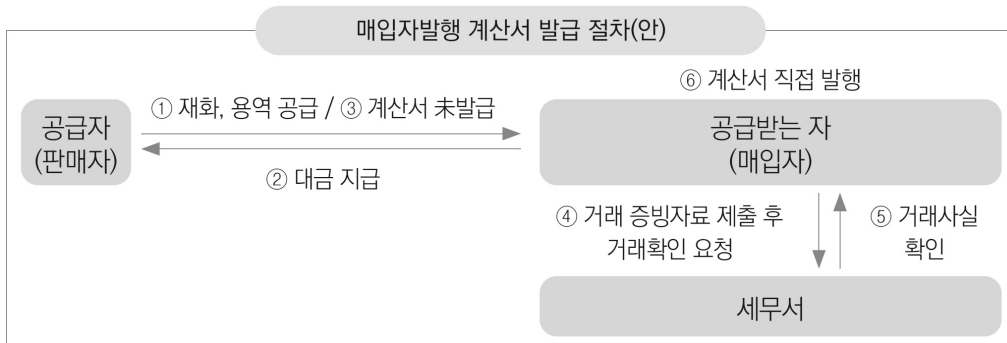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면세 재화 용역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 공급의 경우 공급자가 부도·폐업 등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 확인 하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종전에는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으나

■ 하반기부터는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자 부도·폐업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합니다.

- 추진배경 : 납세자 권익보호
- 주요내용 :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를 시행합니다.

■ (적용요건) 고위험·고수익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

* 공모펀드 : BBB+이하 회사채 45% 이상,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 60% 이상 편입

사모펀드 : BBB+이하 45% 이상과 A등급 15% 이상 편입

■ (특례내용)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가입후 3년간 발생 소득에 한정)

■ (적용한도) 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

■ (적용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추진배경 :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 주요내용 : 고위험·고수익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14% 분리과세
- 시행일 : 2023년 6월 12일 이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위험고수익채권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분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이분체계(회원제, 대중)를 삼분체계(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로 개편('22.5.3. 개정,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0의2))

총 전		개 정('23.7.1.부터)	
회원제 골프장	12,000원	회원제 골프장	12,000원 ²⁾
비회원제 골프장	-	비회원제 골프장	
		대중형 골프장 ¹⁾	-

1) 이용료 주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 미만인 비회원제 골프장(문체부 고시, '23년 기준)

2) 교육세·농특세(7,200원) + 부가가치세(1,920원) 포함시 총 21,120원

■ 이는 실질적인 골프대중화 기여를 반영하기 위한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의 취지,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취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과세형 평 도모

■ 금번 개편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함으로써 골프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배경 :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맞춰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 주요내용 : 2023년 7월 1일 부터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회원제 골 프장에 대해 12,000원의 개별소비세 부과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이후 입장행위하는 분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2023년 7월부터 제조자가 국내 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에 대 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이 아닌 기준판매비율만큼 경감된 가격으로 적용 됩니다.

■ 이는 국내 제조물품과 수입물품간 과세형평을 제고하여 개별소비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 국내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나,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 우 등은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이 과세표준

■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판매가격에서 유통·판매마진 등을 고려한 기 준판매비율* 만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경감됩니다.

* 자동차 18%, 가구 38.9%, 모피 24.6%(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3년 주



기로 고시)

■ 금번 개편을 통해 국산제품과 수입제품간 과세형평이 제고되고, 국산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인하되어 소비자 부담 완화 및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배경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시 국내 제조물품과 수입물품간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제조자가 국내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기준판매비율만큼 경감
 - (기준판매비율)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분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2023년 6월까지 자동차에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제도가 종료되어 하반기부터는 기본세율로 환원(탄력 3.5%, 한도 100만원→기본 5%)되어 적용됩니다.

■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하여 탄력세율 30%* 인하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 기본세율 5% → 탄력세율 3.5%, 한도 100만원

■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 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어 탄력세율을 종료하였습니다.

탄력세율 제도가 종료되어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시행*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및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도 올해 계속 시행되므로,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시) 그랜저(출고가 4,200만원 가정)의 경우 탄력세율 환원 시(+90만원), 과세표준 경감효과(△54만원)로 구매가격은 +36만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추진배경 : 코로나19 대응 내수진작 대책으로 시작된 제도의 정책목적 달성
- 주요내용 : 제조장 반출·수입가격의 3.5% → 5%로 환원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수입분부터

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등 외환거래 편의 제고

「외국환거래법」 제정('99년) 이후 연간 5만불로 유지되어 온 無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금년 7월부터 10만불로 확대됩니다.

- 앞으로 연간 누계 10만불까지는 사유 및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 그간 기업이 연간 3천만불을 초과하는 대규모 외화차입을 할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가 필요했으나, 금년 7월부터 그 기준이 5천만불로 상향 조정됩니다.

대형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환전을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그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투자목적이 아닌 일반환전이 가능했으나, 금년 7월부터 그 대상·범위 등이 확대됩니다.

- 앞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9개 대형증권사는 기업·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되므로, 고객들은 별도로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환전할 수 있게 됩니다.

- 추진배경 :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에 대한 부담 최소화
- 주요내용 : 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금액 상향, 대형증권사의 국민·기업 대상 일반환전 허용
- 시행일 : 2023년 7월 4일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 변경

입찰참가자에게 충분한 서류 검토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하였습니다.



- 현재 입찰서류 제공시점이 입찰공고일에서 입찰등록마감일로 규정되어 있어 발주기관이 입찰 공고일에 입찰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 입찰참가자가 사업검토를 할 시간이 충분히 부여되지 않아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제 발주기관이 입찰서류를 입찰공고일에 즉시 교부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가 서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입찰참가자의 서류 검토 시간 부여
- 주요내용 :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
- 시행일 : 20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협상계약 및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상향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상계약 및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이 상향됩니다.

-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협상계약의 경우 낙찰하한율이 60%에서 70%로 상향됩니다.
- 특히, 고위험 직종인 소방·군·경찰 안전 장비에 대하여는 낙찰하한율이 60%에서 80%로 대폭 상향됩니다.

-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낙찰하한율이 60%에서 70%로 상향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 주요내용 : 협상계약 및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상향

구분		낙찰하한율	
		현행	개정
협상계약	소방·군·경 안전장비	60%	80%
	그 외	60%	70%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60%	70%

- 시행일 : 20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기술형 입찰 설계보상비 조기 지급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낙찰탈락자에게 지급되는 설계보상비를 조기지급하였습니다.

* 터키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그동안 기술형 입찰에 참가하여 기본설계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 낙찰 탈락이 확정되었음에도 설계보상비 지급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 실시설계적격자(1순위) 결정시 2순위 이하 입찰자들은 실질적으로 탈락하나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낙찰자가 결정(12개월 소요)된 이후 보상비 지급

■ 향후에는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후에 설계보상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비용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기술형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하여 기본설계 보상비의 일부를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 때 지급
- 시행일 : 20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및 납부 서비스 제공

2023년 7월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App(「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가 해당 App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납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해집니다.



■ 또한, 현재 인천공항(T2)과 김포공항에서만 가능한 모바일 신고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5월 1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성실신고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부터 세금 부과·납부까지 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통관환경 구축
- 주요내용
 - (모바일 납부 서비스 제공) 여행자가 과세대상 물품을 모바일 신고 시 납부세액을 자동 계산하여 고지서 발급 및 세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납부 시스템' 구축·운영
 - (모바일 신고 확대) 현재 인천공항(T2)과 김포공항에서만 가능한 모바일 신고를 전국 공항만 세관으로 확대
- 시행일 : 2023년 7월 17일

〈금융위원회〉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19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대신 각 종목별로 외국인 전체 10%, 외국인 1인 3%라는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금융감독원 사전등록을 요구하였습니다.

■ 1998년 한도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면서 현재 2,500여개 상장사 중 33개 종목이 외국인 보유 전체한도, 그 중에서도 2개 종목만이 외국인 개인별 한도 관리대상임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약 30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하여 계좌정보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11년 G20 도입)

■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에도 외국인 전체한도*나 인별한도**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 (전체한도) 외국인 인별 ID 없이도 거래 정보를 통해 외국인 전체 지분 보유규모는 파악가능

** (인별한도) 2개 종목에 대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기준으로 별도 관리

- 추진배경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를 과감히 개선
- 주요내용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 가능
- 시행일 : 2023년 12월 14일

혁신기업 최고보증한도 확대

혁신기업의 글로벌 선도기업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부터 최고보증한도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혁신기업도 기업당 보증한도가 70억~150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웠습니다.

■ 금번 보증한도 확대조치는 신보가 선정하는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과 혁신리딩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 기업당 최대 200억원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합니다.

- 추진배경 : 고금리, 경기둔화에 따른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혁신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성장자금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혁신기업의 빠른 성장지원을 위한 최고보증한도를 200억원으로 확대
 -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 기존 150억원 → 변경 200억원
 - (혁신리딩기업) 기존 70억원 → 변경 200억원
- 시행일 : 2023년 하반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및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강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포함시킴으로써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병과(併科) 가능)하게 되어,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고 있어 처벌이 약함

- 추진배경 :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웠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자체에 대한 처벌수위도 낮은 수준임

* ('18년) 2,547건 → ('21년) 22,752건 ('18년대비 약 9배 증가)

** 현행 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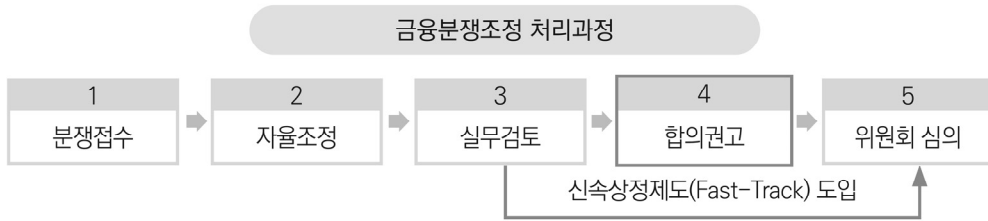
- 주요내용
 - (법 적용대상 확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定義)에 포함시킴으로써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 가능
 - (처벌수위 강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병과(併科) 가능)
- 시행일 : 2023년 11월 17일

금융분쟁조정제도 신속성 및 독립성 강화

금융분쟁 신속상정제도(Fast-Track)를 도입하여 분쟁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분쟁조정위원을 추천방식으로 선정하여 처리결과에 대한 공정성도 확보됩니다.

■ 그간 금융 관련 분쟁 건수가 증가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불만도 일부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금융분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신속상정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금융분쟁을 심의·의결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추가하여 독립성도 제고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3분기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 실효성 제고(국정과제)
- 주요내용
 - － (신속성)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신속상정제도 마련
 - － (독립성)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위원 선정기준 추가
- 시행일 : 2023년 3분기

온라인·원스톱 대한대출 인프라 구축

소비자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하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신용대출 취급 주요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대출 대상

■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4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며,

■ 대출비교 플랫폼 앱,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총 15분 안에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 － 저축은행 → 은행, 캐피탈사 → 저축은행 등 금융업권 간 갈아타기 역시 가능하며, 금융소비자는 자유롭게 원하는 대출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 : 플랫폼, 다른 금융회사 앱에서 기존 대출 조회가 가능한 54개 금융회사]

금융업권	금융회사	계
은행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토스	19(전체)



저축은행	SBI, OK*, 페퍼, 웰컴, 다올, 애큐온, 한국투자, JT천애, 신한, JT, KB, 모아, 대신, 키움, 예가람, 하나, 고려, HB	18
카드	국민, 롯데,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7
캐피탈	롯데*, 우리금융, 하나, 한국, 현대, BNK, DGB, JB우리, KB, NH	10

* OK저축은행, 롯데캐피탈의 경우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7월~) 이후 지원 예정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의 경우 주요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추진배경 : 고금리 시기 국민의 이자부담 경감 및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도입
- 주요내용 : 기존대출 조회부터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기까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 시행일 : 2023년 5월 31일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준이 강화됩니다.

■ 금년 하반기 변경되는 제도에 따르면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 (기존 공개 대상)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0억원 이상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 금번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를 통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납자의 적극적인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아래와 같이 강화

구분		기존	개편 후
공개기준	체납기간	2년	1년
	체납액	10억원	5천만원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2023년 7월 1일부터 하나의 주된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노무제공자들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4개 직종을 신규 적용*(현행 14개→18개)하고, 기존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신규 직종) 건설현장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24.1.1.부터 적용)

** (범위 확대)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일반화물차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신협·새마을금고는 '24.1.1.부터 적용)

※ 보험설계사(교차모집, 신협·새마을금고 등) 등 일부 직종은 2024년 1월 1일 부터 적용 예정(검토)

■ 이를 통해 약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추진배경 :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으로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보호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쉽고 간단한 위험성평가 방법과 상시평가가 새로 도입되고, 위험성평가 모든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새로운 위험성평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23.5.22. 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시행)

■ 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평가를 재정의하였고, 위험성 결정 시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반드시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도 재해사례, 근로자 경험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정과 결정 단계를 통합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Checklist)법,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



법 등을 추가로 도입하였습니다.

▣ 유해·위험요인의 변동이 잦은 사업장은 매년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위험성평가 모든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도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 안전·보건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실시하기 어렵고, 매년 사업장 내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에 대한 부담과 근로자의 참여도 일부 절차에 한정되어 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편
- 주요내용 : 중소기업 사업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쉽고 간편한 방법을 추가 도입(체크리스트,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OPS 등), 유해·위험요인 변동이 잦은 사업장을 위한 상시평가 신설, 위험성평가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평가 결과에 대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한 공유 등
- 시행일 : 2023년 5월 22일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2023년 7월 1일부터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도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보장합니다.

▣ 기존에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만 남은 휴가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고용보험법」 제76조의 2),

- 2023년 7월 1일부터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 추진배경 :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산·사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모성보호제도 활용
- 주요내용 :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유산·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 운영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 과정이 운영됩니다.

■ K-디지털 트레이닝은 삼성·KT와 같은 선도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는 현장 프로젝트 중심의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사업입니다.

■ 그간 350시간 이상의 장기 훈련과정만 운영하였으나, 실무역량 향상을 위해 추가 훈련을 원하는 훈련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을 추가로 운영합니다.

*기업의 심화 프로젝트가 70% 이상 편성되어 있는 350시간 이내의 훈련과정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라면 누구나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에 참여하여 신기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실무역량 향상을 위해 추가 훈련을 원하는 훈련생들의 수요 증가
- 주요내용 : 중·고급 프로젝트가 70% 이상 편성되어 있는 350시간 이내의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 운영
 -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라면 누구나(카드잔액 무관, 기존 훈련참여 이력 무관)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 1회 참여 가능
- 시행일 : 2023년 6월 1일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대상 확대·자부담금 폐지 등 제도 개편

그간 만 45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중장기적인 관점의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해 온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사업이 개편됩니다.

* 1,000인 미만 기업 재직자

■ 대상 연령을 만 45세 이상에서 만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보다 이른 시기에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 상담 참여자에게 의무 부과되었던 자부담금(상담 비용의 10%)을 폐지하여 비용 부담 없이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 경력설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원 기능 연령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자부담 면제 등 제도 개편
- 주요내용
 - (지원 대상 확대) 만 45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만 40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참여 부담 완화) 자부담금(상담 비용의 10%) 폐지
- 시행일 : 2023년 6월 1일
 - 2023년 6월 1일 이후 개설되는 상담 과정부터 적용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그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23년 7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 또한,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당 1억원, 근로자 1인당 1천만원으로 지원한 융자한도를 사업주당 1억5천만원, 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으로 상향합니다.

■ 이와 병행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융자 상환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합니다.

- 추진배경 :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규제 완화
- 주요내용
 - (지원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
 - (융자한도) 사업주당 1억5천만원, 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 (상환방법)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

도를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 * 사업주가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주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

■ 또한, 지원대상의 소득요건을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서 지원신청 근로자 본인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평균보수로 변경하여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곧바로 확정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더불어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보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시 지원하도록 변경합니다.

- 추진배경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제도 활성화 추진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 (소득요건) 신청 근로자 본인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평균보수 월350만원 이하
 - (규정정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시 지원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업종별 취업지원허브 구축

2023년 하반기에는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 산업인 조선·반도체 업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인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구축합니다.

■ 「업종별 취업지원허브」에서는 광역 단위의 산업별 인력수급 동향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 산업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지원 및 훈련수료자 연계, 광역 단위 구인·구직풀 구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채용행사 기획 등 업종별 특화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계의 구인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주요 산업은 입지 및 경제여건 등에 따라 산업권역(Industry-Belt)을 형성하며 성장함에 따라 고용서비스 대응체계 전환
- 주요내용 : 산업동향·채용수요 모니터링, 산업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지원 및 훈련 수료자 매칭, 광역 단위 구인·구직풀 구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채용행사 기획 등 업종별 특화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밀착 제공



- 시행일 : 2023년 하반기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 운영

2023년 8월부터 구인·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로 확대 운영합니다.

-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구인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를 제공합니다.
 - 기업에는 고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구직자에게는 직업역량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약을 지원합니다.

- 추진배경 : 구인애로기업과 구직자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 주요내용
 - (기업) 구인기업의 여건 및 특성 진단 결과를 토대로 구인애로유형별 인사노무-산업안전-채용 컨설팅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등 채용 서비스 밀착 제공
 - (구직자) 구직자 역량진단 및 유형분석, 노동시장 정보 분석, 경력개발컨설팅,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종합 제공
- 시행일 : 2023년 8월
 - * 2023년 3월 기업 35개, 구직자 24개 고용센터 → 2023년 下, 48개 관서 확대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2023년 7월 1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온라인으로 실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실업의 신고 방법이 개선됩니다.

- 구직급여는 근로의사 및 능력 등의 확인을 위해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신고를 하도록 「고용보험법」 제4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재난 상황으로 대면 출석이 어려워 실업신고를 신속히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수급자격 인정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재난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고용보험시스

템을 통해 온라인 실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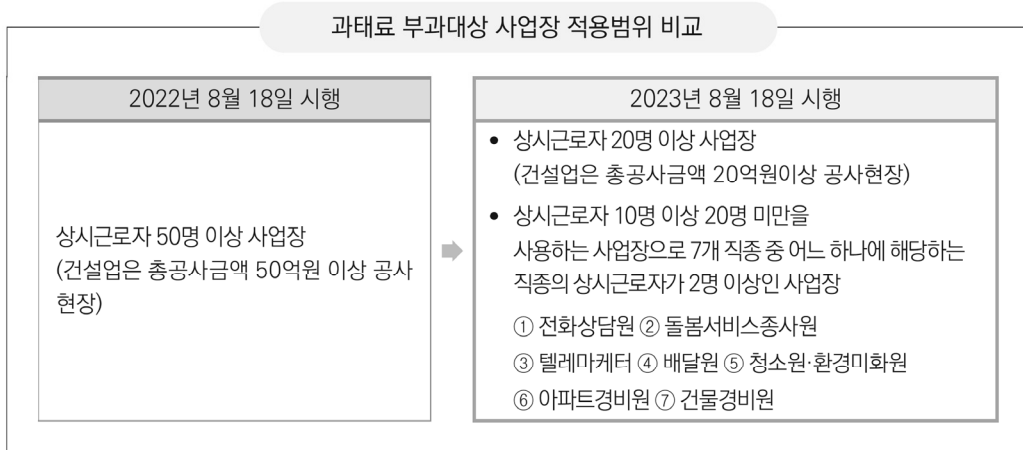
- 추진배경 : 재난 등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
-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실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적용대상 확대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①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현장) 및 ② 7개 직종의 근로자가 2인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됩니다.

* (과태료) 1,500만원(휴게시설 미설치), 1,000만원(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이하



- 추진배경 :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재규정(과태료 부과) 도입
- 주요내용 :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장 확대
- 시행일 : 2023년 8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시법 전환

2014년 시행 이후 10년 한시법*으로 운영되어온 중견기업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됩니다.

* 기존 유효기간 : 2024년 7월 21일까지

■ 중견기업들은 수탁 중견기업 보호, 기술보호, 인력지원 등 14개 특례를 계속해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 특례(14개) : 조세, 수·위탁, 이러닝사업, 국외판로, 기술보호, 인력지원, 미취업자 고용지원, 매출채권보험, 중진기금, 가업승계, 명문장수, 옴부즈만, M&A, 사업전환

■ 국내 50여개의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견기업법의 상시법 전환으로 중견기업 정책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 중견기업 정책에 대한 안정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상시화) 유효기간 명시 규정 삭제(부칙 제2조)
 - * 당초 유효기간은 시행 후 10년 뒤인 2024년 7월 21일 까지
- 시행일 : 2023년 10월 19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향후 설치되는 345kV 이상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택 소유자는 기존 주택매수 청구와 선택적으로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외측 전선에서 345kV 60m, 500kV 100m, 765kV 180m 이내의 지역

지원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30%를 기준으로 하되,

* 개별 및 공동 주택가격의 30%(산업통상자원부 부령에 규정 예정)

■ 최저 1천2백만원에서 최고 2천4백만원 범위내에서 지급됩니다.

- 추진배경 : 송전선로 일정 거리 내 주택소유자에 대한 '주택매수 청구권' 이외 추가적인 보상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이 기존의 주택매수청구와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23년 7월 4일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분리발주 시행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은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발주 하여야 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용역(「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및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건축법」 제67조)이 분리발주 대상이며,

*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또는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건축법」 제91조의3)

- 2023년 11월 16일 이후 집행계획공고 대상 및 계약(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는 사업)되는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단,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리발주 제외대상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법 시행 전 개정 예정

- 추진배경 :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용역의 무분별한 하도급 및 이로 인한 저가 수주로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입
- 주요내용 :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은 건축 등 타 분야와 의무적으로 분리발주
- 시행일 : 2023년 11월 16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됨에 따라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급망 안정화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산업부장관은 개정법을 근거로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하고 관련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해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P턴)하는 경우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비상시 해외 생산품을 국내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에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운영 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와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급망 분석 및 대응 기반도 강화되었습니다.

- 추진배경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공급망 교란에 대응한 공급망 안정화 대응체계 구축
- 주요내용 :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공급망안정품목 지원사업 근거 신설,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및 공급망센터 운영근거 신설 등
- 시행일 : 2023년 12월('23.6월, 공급망센터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2023년 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의무가 부과됩니다.

* 수·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

■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90일 이내의 단기계약 또는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인 경우,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약정서를 발급하거나, 약정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위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진배경 :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값 받는 여건 조성
- 주요내용 :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약정서 기재·발급 의무 부과, 위탁기업의 탈법행위 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연동 관련 분쟁조정 등
- 시행일 : 2023년 10월 4일

국민 편의 및 외환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획재정부 2023. 6

정부는 '23.6.27(화)에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3.2.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민·기업의 외환거래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경감되고, 형벌적용 기준이 완화됩니다. 자본거래시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200만원)에 맞춰, 사후보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액을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또한,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전당 2만불 이내에서 5만불 이내로 확대하고,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집니다.

또한,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왑시장 참여도 허용됩니다.

한편, 지난 번 행정예고(6.8~6.18일)한 바와 같이 무증빙 송금한도 상향(연간 5만불 → 10만불), 추가계좌 개설없는 제3자 외환거래 허용 등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개정(참고 2)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진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은 '23.7.4일(화)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1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추진 배경

- ① 형벌·과태료 부과 수준이 그간 경제규모 성장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 발생

-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06년도부터 건당 2만불 이내로 지속 유지
 - 외환거래 확대 등에도 자본거래 사전신고 의무 등 절차적 규제 위반에 대한 형벌 적용기준은 '09년도 수준(10억원 초과)과 동일
 - 사후보고 위반(700만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사전신고 위반 금액(200만원 또는 위반금액의 100분의 4)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
 - ② 현행 법규상 증권금융회사는 외화자금 조달을 위한 외환 스왑시장 참여가 불가하여 증권사들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에 애로
 - '20.3월 ELS 마진콜 사태* 등 위기발생시 증권사의 단기 외화자금 조달경로가 제한되어 시장변동성 확대요인으로 작용
- * 코로나 사태로 외화자산 가치 급락 → 추가연계증권(ELS) 손실구간 진입
→ 해외거래소가 증권사에 외화증거금 요청(마진콜) → 외화자금 수요 증가

□ 주요 내용

- ① 형벌적용 기준 및 과태료 부과금액 완화
 -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불 이내에서 5만불 이내로 확대
 - 절차적 위반에 대한 형벌적용 기준금액(자본거래 신고위반: 10억원 → 20억원, 비정형적 지급등 신고: 25억원 → 50억원) 대폭 상향
 -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완화
- ② 증권금융회사의 외환스왑시장 참여 허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를 외환 스왑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외국환중개회사의 상대방으로 규정

참고 2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주요 과제

- ① 해외송금 서류증빙 절차 및 신고 기준·대상 대폭 완화
 - ① 해외송금시 거래 당사자의 증빙서류 제출의무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을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
 - ② 「원칙 자유·예외 규제」 체제로 전환(2단계)에 앞서 외환건전성에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를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
- ② 기업의 외화조달·운용 자율성 확대 및 해외투자 불편 해소
 - ① 대규모 외화차입에 대한 기재부·한은 신고 기준을 3천만불에서 5천만불로 상향*하여 외화조달 편의 제고



- * 연간 5천만불 이내 외화자금 차입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 사후보고 필요
- ② 현지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하여 금전대차·보증으로 통합하고, 차입자금의 국내예치 제한 완화* 등 외화자금 운용 자율성 확대
 - * 현지금융 통한 해외현지 차입은 원칙적으로 국내반입 불가 → 국내반입 허용
- ③ 해외직접투자 관련 수시보고 제도를 매년 1회 정기보고로 통합하고 내용도 간소화
- ③ 업권별 업무 칸막이 폐지(2단계)에 앞서, 증권사 對고객 일반환전 허용*을 통해 외환분야에서 금융기관간 경쟁 촉진
 - * 現) 자기자본 4조원 ↑ & 단기금융업 인가 4개 증권사만 기업 대상 일반환전 가능
→ 改) 9개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기업 대상 일반환전 가능
- ④ 국내자산 매력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투자자가 추가계좌개설 없이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제3자 FX)
- ⑤ 관계기관 및 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법령해석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를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
 - * (구성) 기재부(위원장 국제금융국장), 금융위·한은 등 관계기관, 민간위원
(대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해석, 외환제도 개선과제 논의